

성균관대논술

언어형

목차

2026학년도 논술위주 언어형 (인문·사회·경영 등)	3
1교시 · 문제 1	3
1교시 · 문제 2	7
1교시 · 문제 3	10
2교시 · 문제 1	13
2교시 · 문제 2	17
2교시 · 문제 3	21
 2025학년도 논술우수 언어형	 24
1교시 · 문제 1	24
1교시 · 문제 2	28
1교시 · 문제 3	30
2교시 · 문제 1	32
2교시 · 문제 2	36
2교시 · 문제 3	41
 2024학년도 논술우수 인문계	 44
1교시 · 문제 1	44
1교시 · 문제 2	48
1교시 · 문제 3	51
2교시 · 문제 1	53
2교시 · 문제 2	58
2교시 · 문제 3	60

2026학년도

논술위주 언어형 (인문·사회·경영 등)

1교시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병리 현상의 촉매가 되어 사회적 일탈을 가속하는 위협 요소로 부상했다. 데이터가 몇몇 대기업에 집중되고 알고리즘이 편향된 선택을 유도할수록 기존 사회 구조의 약점은 더 잘 드러나게 된다. 개인의 기존 선호를 강화하는 알고리즘은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은 더욱 미워하고 좋아하는 대상은 더 좋아하게 만들어, 혐오와 증오가 사회 전체에 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대 통신 기업은 맹목적인 이윤 추구에 사로잡혀 사회 불신과 갈등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역량이 부족한 정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계층 간의 이동이 경직된 사회 구조에서는 소외 계층의 일탈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통치’의 기능적 조화가 필요하다. 통치 기구로서의 정부는 법과 제도, 규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자원 투자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협치 기구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 참여 기구의 구축과 운영, 민관 협력 모델 개발, 기술 표준화 등은 협치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법과 제도를 통해 통치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협치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동기에는 협치와 통치를 잇는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빨라졌고, 익숙한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문제 또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특정 인종·계층을 겨냥해 상품이나 정보를 제시하거나, 혐오·차별 콘텐츠를 부각하면 소수 집단은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게 된다. 편향된 정보에 노출된 대다수 사용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도 협치와 통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 소셜 미디어 기업에서 제공한 사용자 데이터가 정치 캠페인에 활용되면서, 무단 수집된 수억 명의 이용자 정보로 분석된 맞춤형 선거 광고가 제작됐다. 당시 미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었지만, 해당 기업이 수집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 변화에 정부는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시민사회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디지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협치와 통치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의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제시문 2]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지식주의는 지식과 덕을 동일시한 도덕 철학으로서, 아크라시아(akrasia) 즉 의지박약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아크라시아란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선악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전통적인 아크라시아의 존재를 부인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은 판단력을 타고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경험과 성찰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 이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채 종종 충동에 휩쓸린다. 예컨대 한 회사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자신의 행위

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지 몰라도 중국에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부패한 정치인의 거짓 선전에 속아 타인이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행동도 사실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라기보다는 진실을 식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악행은 판단력의 결핍에서 비롯되며, 인간은 참된 앎을 깨달으면 악을 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는 어리석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악을 줄이는 방법은 앎의 확장에서 찾아야 한다. 생각하는 개인은 사회의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것의 근거를 이해한다. 반면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에서는 제도가 부패하고 권력이 도덕적 근거를 상실한다. 이해를 통한 깨달음만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사유 능력의 훈련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더욱 시급하게 요청된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은 일상화된 문제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소식을 접한다. 이런 시대적 특성은 사람들을 피로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사유하는 힘이 결여된 사람은 주의가 산만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정보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며,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여론과 감정에 휩쓸리고 복잡한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한다. 문제는 지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도덕성을 단속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길러줄 때에야 비로소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이 탄생한다. 이성이 인간의 삶을 이끌 때, 도덕은 명령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화며, 문명의 가장 깊은 형태다.

[제시문 3]

고전적 형벌론자들은 인간을 완전한 책임능력을 지닌 주체로 전제했다. 그들은 모든 행위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결과라고 믿었으며, 범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범법자는 스스로 선악과 시비를 가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택한 사람이며, 범죄는 개인의 타락과 부도덕함에서 비롯된 일탈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공포를 통해 질서를 강제하는 장치로 이해되었으며, 형벌의 원리는 ‘보복’과 ‘응징’이었다. 따라서 초기 근대 유럽의 형벌은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몹시 잔혹하게 집행되었으며, 죄를 밝혀내고 처벌하기 위해서 고문도 합법으로 인정되었다. 단순한 절도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수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되었다. 이런 형벌은 죄인의 행위에 걸맞은 응보로서 정당화되었고, 사법은 이와 같은 처벌 체계를 운용해야 할 책임을 진 국왕의 당연한 대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은 이러한 전통적 형벌론이 경제와 교육 부문에 존재하는 현실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 부자의 보석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고드윈은 그 청년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처벌하자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청년의 행위가 자신이 처한 극심한 빈곤 상태와 부나 명예 같은 문화적 목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조급하고 절망적인 몸부림이라고 보고, 진정한 책임은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사회에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에 있으므로, 청년을 투옥하는 일은 사회적 책임을 은폐·회피하는 일이 된다. 고드윈은 형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혹한 형벌이 범죄를 감소시키기는 커녕 인간을 더 교활하게 만들고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리라고 예상했다. 또한 사회의 임무가 인간을 처벌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난 여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한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허가가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계속 일했다면, 그것은 형식상 분명 범법행위다. 그러나 그 행위는 노동법과 이민 제도의 구조적 배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법과 제도가 현실의 인간 조건을 외면한 결과다. 문제의 핵심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불법적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그 노동자가 정직하게 살아가도 결국 여러 권리에서 배제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드윈의 관점은 정의 개념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는 정의를 ‘개선’과 ‘회복’의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형벌론을 극복하고, 형벌의 목적을 공포에서 개혁으로, 도덕의 근거를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시켰다. 법과 정치의 목적이 인간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동시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체사레 베카리아나 볼테르 같은 문인들의 사상에서도 나타났으며,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제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철학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나아가 이 새로운 사상의 조류는 19세기 후반 여러 학제가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서 등장한 후 현대 법학·사회학 이론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의 형법에도 각인되었다. 공개처형과 고문을 금지하고 잔인한 형벌을 배척하며 징역과 구금의 목적을 수인의 교화 및 재사회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고드윈의

사상은 형벌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개선이 가능한 사회의 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 삶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혁명적 기획이었다.

[제시문 4]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 부족할 때 사회 질서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숙과 성찰의 계기였다. 방역 초기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는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되며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천이었고,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방역 수칙 위반과 자가격리 이탈은 윤리적 실패의 단면이었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감염 확산을 가속화하고 사회를 마비시켰다. 2020년 2월 초까지만 해도 10명 이하였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초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3월 말에는 4,000명을 돌파했다. 확진자 증가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3월 말에는 검역·격리·감염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인 코로나19 방역법 초안이 정부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와 안심밴드 등의 강력한 하향식 통제 정책이 도입된다. 이러한 통제 정책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불신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자발적 시민 봉사 단체가 조직되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했던 것은 자발적 행동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준 사례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비상식량 배급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자 부족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실천은 개인의 덕성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복지와 질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행복한 삶의 기초는 덕 있는 삶의 실현이며, 성숙한 인격의 완성은 건강한 사회 질서와 공동선 실현의 기반이 된다. 시민 각자가 성실, 배려, 정의, 책임과 같은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는 책임과 의무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 관계가 얹혀있다. 팬데믹 동안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퍼지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자.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보 공론장에서 시민은 수용자인 동시에 진위를 판별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할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시민의 책임감은 과소 평가될 수 없는 요소다. 감시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시민들 스스로 더 좋은 세계를 만들 가능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진정한 변화는 억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 예시 답안

제시문들은 사회적 일탈과 범죄의 원인에 관해 대립하는 두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범죄를 포함한 일탈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구조 및 제도에 있다는 입장으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입장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1>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한 부작용으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편향된 선택을 확산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시민단체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또는 기술 표준화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협치’와 ‘통치’의 조화가 필요하다. <제시문 3>은 일탈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고전적 형벌론의 입장을 비판한다. 일탈한 개인에게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배제한 것이기에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윌리엄 고드윈의 사상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일탈 행동 기저에는 사회적 조건이 그 원인이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병리 현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구성해야 한다. 두 제시문은 개인보다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일탈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은 통치와 협치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제도적 측면에 주목하는 반면 <제시문 3>은 형벌론의 차원에서 사회적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대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2>는 일탈 행위가 개인의 의지박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식별할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도덕이란 곧 앎이며, 일탈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윤리적 가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시민 스스로 사유하여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제시문 4>는 시민들의 도덕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과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일탈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을 내면화할 때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시민 스스로 성숙한 인격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실천할 때 공공선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을 사회 구조의 결함이나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개인에서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2>가 개인의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는 반면, <제시문 4>는 개인의 윤리적 덕성 함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일탈 및 범죄의 근본 원인으로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를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40점

1교시 ·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1교시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는 두 국가 A, B의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40점)

<자료 1>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과 시민 조사 결과

<자료 1-1>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

항목	A국	B국
최근 5년간 정부의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	5	20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 ¹⁾	64	40
미디어 다원성 지수 ²⁾	35	84
인터넷 보급률(%) ³⁾	98.6	98.4

주1)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미달 수준을 나타냄. 0~100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큼을 의미함. 각 국가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디지털 역량 평균값은 동일함

주2) 국가에 다양한 정보원(언론, 정부기관, 연구소,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이 존재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를 표준화한 값(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다원성이 높음을 의미함)

주3) (인터넷 이용자 수 / 전체 인구 수) × 100

<자료 1-2> 악성 댓글 신고율⁴⁾ 시민 조사 분석 결과

- 조사 내용: A국과 B국 국민의 냉소적 태도,⁵⁾ 정보 이해력,⁶⁾ 악성 댓글 신고율
- 조사 기간: 2025년 1월 1일~31일
- 조사 대상자: 각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집한 A국 5,000명, B국 5,000명

<악성 댓글 신고율>

A국		냉소적 태도	
		약함	강함
정보 이해력	낮음	30	16
	높음	80	40

B국		냉소적 태도	
		약함	강함
정보 이해력	낮음	31	16
	높음	84	38

주4) 평소 악성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의 신고 기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0~100으로 나타냄. 값이 클수록 더 활발하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국가의 악성 댓글 노출 빈도 평균값은 동일함

주5)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의 안녕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는 개인의 태도. 두 국가의 냉소적 태도 평균값은 동일함

주6) 개인이 정보의 의도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두 국가의 정보 이해력 평균값은 동일함

<자료 2> 각 국가의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현황

다음은 A국과 B국의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정도와 관계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나타난 지리적 도표다. 각 칸은 국가 내 하나의 지역을 의미하며, 거리가 가까운 칸들은 실제 지리적 거리도 가까움을 의미한다.

<자료 2-1> A국

가.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수준⁷⁾

97	88	58
51	53	30
92	35	48

나. 지역별 사회·경제 취약성⁸⁾

72	70	57
20	49	17
83	30	40

다. 지역별 디지털 역량 격차⁹⁾

90	85	64
55	51	44
89	48	52

고(70~100) 중(50~69) 저(0~49)

<자료 2-2> B국

가.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수준⁷⁾

55	30	39
70	55	20
58	35	40

나. 지역별 사회·경제 취약성⁸⁾

42	40	55
70	66	17
57	45	30

다. 지역별 디지털 역량 격차⁹⁾

52	20	22
60	50	26
52	32	51

고(70~100) 중(50~69) 저(0~49)

주7) 각 지역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된 정도를 각 지역의 인구 수를 반영하여 표준화한 지표(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확산 수준이 높음)

주8) 범죄율, 빈곤율, 실업률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취약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음)

주9) <자료 1-1>에 제시된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의 해당 국가 지역별 값임

■ 예시 답안

<자료 1>은 두 국가의 디지털 정보환경의 차이와 악성 댓글에 대한 개인의 신고율을 보여줌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에 대한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다. <자료 1-1>에서 B국은 A국에 비해 디지털 정보환경의 성숙도가 높은 사회임을 보여준다. 정부를 비롯한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디지털 정책 공청회 횟수는 A국이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에 그친 반면, B국은 4회 정도를 열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통치와 협치의 기반이 마련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모두 인터넷 보급률이 98%를 상회하여 거의 모든 시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미디어 다원성 지수 및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에서 두 나라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B국에 비해 A국은 다양한 정보원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여의치 않아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 1-2>를 보면, 악성 댓글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교정하려는 시민의 실천 수준이 두 국가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국가 모두 냉소적 태도가 강하고 정보 이해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악성 댓글 신고율이 16% 정도로 가장 저조한 반면, 냉소적 태도가 약하고 정보 이해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악성 댓글 신고율이 양국 모두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냉소적 태도 혹은 정보 이해력 요인 중 하나의 요인만 높은 집단보다도 악성 댓글의 신고기능을 더욱 활발히 활용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의도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사회적 병리 현상을 교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으로써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지식과 덕성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반면 <자료 2>는 양국 모두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수준은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와 관련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국에 비해 디지털 정보 환경의 성숙도가 높은 B국에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낮지만, 양국 모두 국가 내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의 격차가 높은 지역에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3>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서 일탈에 더 가담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드러낸다. 또한 확산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인접한 지역 역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제시문 1>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소외된 계층에서 만연한 사회 병리 현상이 인접 지역으로 번져나갔을 가능성 역시 확인된다. 이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사회 병리 현상의 주 요인임을 보여준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과 <자료 2>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B: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40점

1교시 · 문제 3

※ 제시문은 앞 문항(1교시 · 문제 1), 자료는 앞 문항(1교시 · 문제 2)을 참고하시오.

[문제 3] C국은 유명 고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이로 인해 모조품 시장이 일종의 산업으로 고착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법으로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입장>

C국에서 고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 유통과 판매가 만연한 것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모조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제시문 2>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이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기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조품을 구입한 것이고, 이것이 주변으로 확산했을 것이다. 그 결과 모조품 시장이 일종의 산업으로 고착된 것은 <제시문 4>에서 언급했듯이 시민 각자가 정의와 책임같이 핵심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료 1-2>는 악성 댓글과 같은 일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이해력이 높고 냉소적 태도가 낮아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이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일탈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조품 거래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식을 확장함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정의감을 키우는 덕성 함양도 필요하다. 물론 모조품 구매가 만연한 원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하면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결국은 부패하고 권력의 도덕적 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사고력 배양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입장>

C국에서 고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 유통과 판매가 만연한 것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 있다. 따라서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제도적으로 적절한 개선을 이루는 데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시문 1>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탈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조품 시장이 고착된 것은 정부의 제도와 규제가 시의성을 잃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3>은 개인의 일탈 행위 이면에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고가 브랜드 제품이 여러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찍는 사회 풍조가 모조품 거래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넘어, 부를 숭배하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료 2>를 보면 사회적 디지털 환경을 상대적으로 잘 갖춘 B국이 A국에 비해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보 격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일탈 행위가 만연하는데, 이는 경직된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물론 모조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덕성 결여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제시문 1, 3>에서 보듯 개인의 욕망도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협치와 통치의 조화로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토대로, 해결책은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통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모조품 거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접근법으로, 개인 또는 사회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점

2교시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공익 실현의 방법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리고 그 욕심이 군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다. 소인의 경우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늘 집착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서로 친하게 지낼 때에도 자신의 사적인 입장에서 계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내게 좋은 것은 이렇게 하고 또 내게 좋지 않은 것은 다르게 한다. 소인처럼 이기적이고 사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마음이 졸렬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떠나가 삶이 힘들어진다. 여기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드러난다. 군자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의로움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낼 때에도 군자의 뜻과 생각은 크고 넓다. 소인처럼 마음의 병인 인욕(人欲)에 이끌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부여받은 도덕성이자 자연적인 이치인 천리(天理)를 따라 살아간다. 천리는 천지 만물에 터럭만큼이라도 떨어지거나 간격이 벌어지는 법이 없으며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일이 없다. 크게는 천지의 작용, 작게는 만물의 소멸과 성장, 한 사람의 마음의 운용, 넓게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에 관통되어 있다. 그래서 천리를 따르는 군자는 늘 행동이 도리에 부합하고, 자연적인 도리를 따르기에 마음도 편안하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를 향한 효는 과거나 지금이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도리이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덕에 맞게 실행하는 삶으로, 이는 군자가 지향하는 삶이다. 이처럼 군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성,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 애초에 사(私)와 분리되지 않는 공(公)을 지향한다. 또한 인(仁)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치이다.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공평무사하다. 마치 봄이 되면 천지가 온화한 기운으로 온 생명의 싹을 틔워내듯이 만물이 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인간에게 인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인이 갖든 마음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곧 타인과 내가 하나가 되며,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자기 자신에 비추어 보아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인을 발휘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신 안에 천지의 공평무사한 마음이 깃들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신에 비추어 보아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공과 사를 관통하며 이 둘의 조화 및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선 자신에게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부터 그들이 원하는 삶, 선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주면 그 영향력이 먼 데까지 확장되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고 세상이 잘 다스려질 것이다. 자율적으로 인을 실현할 수 있으면 공익이 자연히 실현될 수 있다.

[제시문 2]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이기적·합리적 존재로서 누구나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해 있는 이중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개인의 존재적 이중성은 오늘날 국가의 행정에 관한 논의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으로 발현된다. 사(私)의 영역은 개별적인 신체로서의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며, 공(公)의 영역은 공동체가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개인은 살면서 여러 공동체에 속하게 되지만, 공적 영역을 규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단기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이익 추구가 공적인 이익의 추구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공적 이익의 실천은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우월한 강제력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공적 영역의 가장 적합한 행위자이다. 그렇지만 공익의 실천이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공익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이 과거에는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주도로 실천되었는데, 도덕 및 종교가 공익을 위한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는 빈민의 구휼을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인생의 가치로 규정하였는데, 국

가 복지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재해나 기아 상황 극복에 기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국가가 공동체의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규범적으로 직접 도맡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공적 영역인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한다. 많은 정치 문화에서 공과 사의 개념을 상정하고 그들을 서로 대비되는 영역으로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의 영역이며 어디까지가 사의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며,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국가가 출현하였다. 보편적 인권 개념과 현대사회의 정교한 관료제에 힘입어 많은 나라에서 공익 추구의 주체가 국가로 규정되었고, 이전 시대에 온전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실업, 출산, 육아, 가사노동, 건강 등의 현안들이 공적 실천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합리적인 법과 제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은 현대 국가가 공익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식적 제도가 가지는 투명성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며,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적 기여를 회피하거나 전가할 수 없게 한다.

[제시문 3]

○○마을은 맛벌이 부부의 공동육아를 위한 자발적 협력관계에서 출발하여 생활공동체와 대안 가족공동체로까지 발전하게 된 사례이다. 어린이집 개원으로 마을 내 육아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조합의 주요 구성원인 맛벌이 부부들(여성과 남성 모두 포함)은 조합의 운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나 직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다. 이후 친목 행사, 상담,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는 나눔 장터나 취미 모임 같은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모임으로, 더 나아가 가족 내부의 사적인 내용들까지도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대안 가족공동체로까지 발전하였다. ○○마을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대안학교 설립, 지역방송 개설,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 돌봄 사업 등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자율적·자치적 공익사업으로까지 확장하여 나아갔다. 친밀하지 않은 낯선 사람들과는 다양하고 비판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친밀성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가족적 친밀성이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실제 사례들로부터 증명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격적 개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바탕으로 형성되던 전통적 의미에서의 인간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친밀성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제도적 규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체계나 내적 기준에 준거하여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가족의 가부장적 관계 질서에 갇힌 억압의 공간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민주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 관계의 정서적 만족, 배려, 돌봄,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친밀성이 민주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들을 살펴볼 때, 친밀성은 공공복리, 공공안전 등 공익을 실현하는 핵심적 기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친밀성 영역에서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가 개인 상호 간의 인격적 신뢰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친밀성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개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는 자신의 실존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사회변혁 운동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처럼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친밀성은 자신의 인격적 개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친밀성은 공(公)과 사(私)를 관통하여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에 기여한다. ○○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사회에서 친밀성은 가족이라는 제도의 울타리에 갇힌 고정된 성격의 것이 아닌 다양한 관계의 형식을 통해서도 추구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밀성은 가족의 틀 안에 제한되지 않고 친구나 연인, 지역사회치회, 육아 공동체, 동호회 등과 같이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마을 사례에서와 같이 친밀성 영역에서의 열린 지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민주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와 자발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속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각자의 고통을 드러내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친밀성을 통해 우리는 사적인 문제를 서로 공감하고 개인 스스로 성찰하고 나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며 공익의 실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제시문 4]

그리스어로 공(公)과 사(私)에 대응하는 용어는 코이논(koinon)과 이디온(idion)이다. 코이논은 공유, 공동성을 의미한다. 코이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폴리스(polis)로 규모는 작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던 도시 국가들이었다. 이와 달리 이디온은 구별, 분리를 의미하며, 공적 공간 밖에서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가정, 취미, 기호 등을 포함했다. 고대 그리스의 많은 폴리스는 공익과 구분된 사적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였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개인의 기여 역시 강조하였는데, 자신들의 복리가 공동체의 복리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쟁과 자연재해는 사적 영역의 영속이 오로지 폴리스의 성공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폴리스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하는 정치적 존재였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의 행복과 공익을 위한 헌신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는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한 나름의 제도를 두고 있었다. 폴리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적 영역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던 스파르타에서와 달리, 아테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의 폴리스에 대한 기여를 끌어냈다. 아테네인들은 정치적 참여를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여겼으며, 공론의 장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책임이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도하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웃 나라의 어떤 법·제도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름 또한 민주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분규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모두에게 평등이 주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유롭게 지냅니다. 한 사람 안에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나랏일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모든 현안은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토론이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토론을 통해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장애물이라고 여깁니다.”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은 시민에게 폴리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시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전쟁과 세금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서 공론적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그 밖의 사항에서는 개인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그들은 “한 사람 안에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나랏일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려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정치적 참여와 공적인 결정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났다.

■ 예시 답안

제시문들은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공과 사의 관계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해 공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공과 사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 방법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1>은 군자는 소인과 달리 보편적으로 부여받은 도덕성이자 자연적 이치인 천리에 따라 살아간다고 본다.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근거인 ‘인’이 깃들어 있는데, 이는 역지사지를 통해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자율적으로 ‘인’을 실현하는 것은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3>은 ○○마을 사례를 통해 개인 간의 자발적 협력 관계에 기초한 친밀성이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육아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 배려, 돌봄,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친밀성이 민주주의 가치와 공익 실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친밀성은 공과 사를 관통하며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두 제시문은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의 가능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문 1>이 인간으로서 본래 갖고 있는 도덕성에서 찾은 반면, <제시문 3>은 자발성을 기초로 한 네트워크(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성에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과 사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익 실현 방법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2>는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이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사적 영역에서 개인들의 이익 추구가 공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은 국가와 같은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행위자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법, 제도, 행정 등을 통해 공익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4>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사례를 통해 공과 사의 구분을 설명한다. 아테네는 개인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공적 영역에 대한 의무를 시민들에게 부과하였다. 시민들은 공론의 장에 참여해야 했으며, 이를 통한 의사결정에 따라야 했는데, 이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공적 제도에 의한 복종의 결과이며 자신들의 복리 추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두 제시문은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의 방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제시문 2>가 주로 국가 주도의 공익 실현을 언급하였다면 <제시문 4>는 공론의 과정을 거친 공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복종을 통해 공익 실현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채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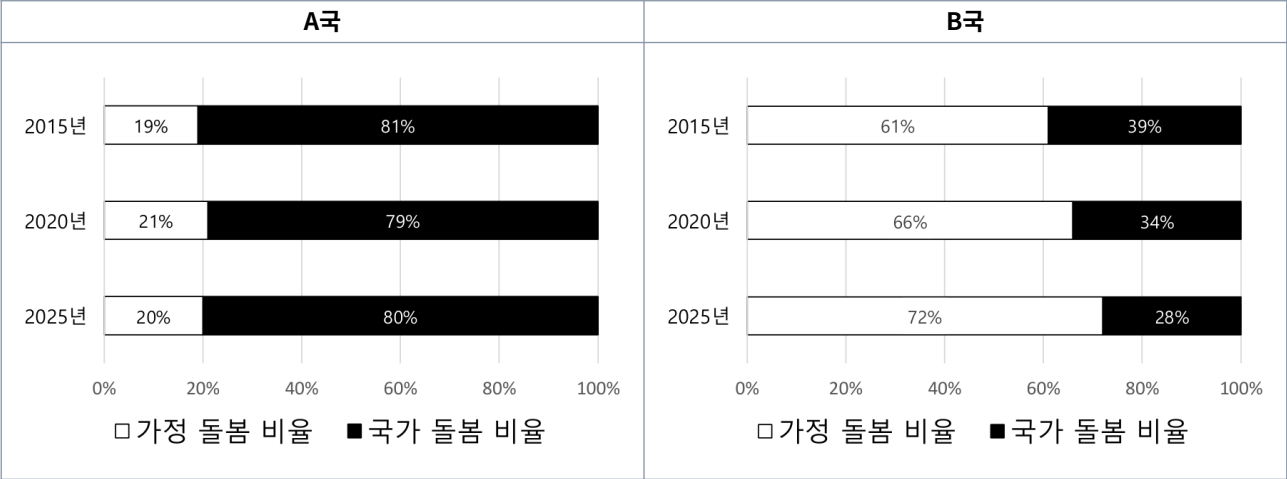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과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40점

2교시 ·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2교시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A와 B 두 국가에 관한 <자료 1> ~ <자료 4>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A국과 B국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모든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함) (40점)

<자료 1-1> 노인 돌봄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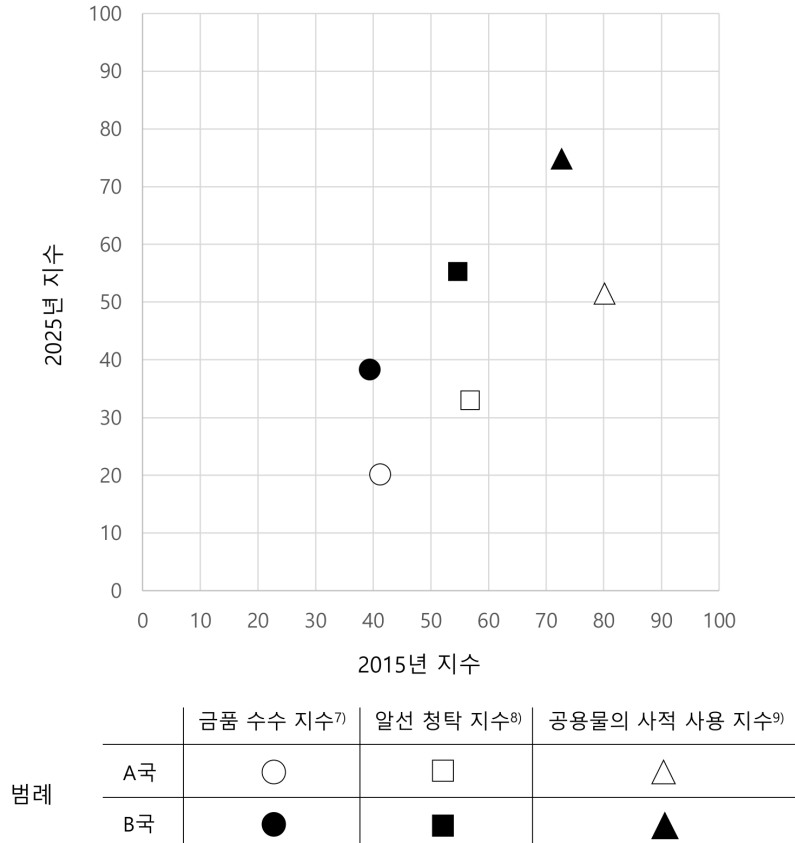


<자료 1-2> 노인 관련 주요 질환 · 사망률 비교

A국			노인 관련 주요 질환·사망률	B국		
2015년	2020년	2025년		2015년	2020년	2025년
14	15	14	중증 치매 발병률(%) ¹⁾	10	9	7
13	13	12	알코올 중독자 비율(%) ²⁾	8	6	4
30	31	29	우울증 비율(%) ³⁾	22	18	15
15	16	15	고독사 비율(%) ⁴⁾	11	8	6
28	27	28	암 사망률(%) ⁵⁾	27	28	28

주1) 65세 이상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최소 0% ~ 최대 100%)
주2)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최소 0% ~ 최대 100%)
주3)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울증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최소 0% ~ 최대 100%)
주4)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최소 0% ~ 최대 100%)
주5)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암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최소 0% ~ 최대 100%)

<자료 2>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현황(2015년, 2025년)⁶⁾



주6) A국은 2020년에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함. 제시된 정보 외에 A국, B국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주7)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지수화한 값(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8) 제3자를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특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탁하는 행위를 지수화한 값(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9)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 차량, 건물 등 공용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지수화한 값(최소 0점 ~ 최대 100점)

<자료 3>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¹⁰⁾

설문 문항 ¹¹⁾	A국	B국
가) 나는 자율적·자치적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4.0
나) 나는 예상치 못한 사회 재난 극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0	4.5
다) 나는 국가가 포괄적 복지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	3.0
라) 나는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이 높다.	4.0	4.5
마) 나는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한다.	4.5	3.5

주10) A국과 B국에서 무작위로 표집된 각각 500명의 성인남녀가 설문조사에 응답함

주11) 각 설문 문항은 5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가별 점수는 설문 참여자의 응답 점수를 평균한 값임 (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4> 주요 사회지표 조사 결과

지표	A국	B국
가) 자원봉사 시간 ¹²⁾	4	9
나)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지수 ¹³⁾	87	65
다) 행정 효율성 지수 ¹⁴⁾	88	71
라) 사회적 자본 지수 ¹⁵⁾	74	91
마) 공동체 의식 수준 지수 ¹⁶⁾	78	88

주12) 국민 1인당 연간 자원봉사 시간 평균

주13)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도 평가 결과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14) 한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자질,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질,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15) 한 국가에서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측정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과 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16) 한 국가에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을 측정한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 예시 답안

<자료 3>과 <자료 4>를 통해 공익 실현 방법과 관련된 공과 사의 관계에 있어 A국과 B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A국 국민은 B국 국민에 비해 국가에 의한 포괄적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자료 3>). 또한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지수나 행정 효율성 지수와 같은 사회지표도 상대적으로 높다(<자료 4>). 이러한 결과를 통해 A국은 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반면 B국 국민은 A국 국민에 비해 자율적·자치적 공동체 활동을 통한 공익 실현 가능성, 예상치 못한 사회 재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 참여,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자료 3>). 이러한 응답 양상은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B국은 자원봉사 시간, 사회적 자본, 공동체의식 수준의 결과 값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B국은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해 공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국과 B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자료 1>과 <자료 2>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자료 1-1>은 노인 돌봄의 주체를 가정과 국가로 구분하여 국가별 비중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주기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를 보면 A국은 국가 돌봄 비율이 약 80% 정도로 상당히 높은 반면, B국은 가정 돌봄이 주를 이루며 비율이 61%, 66%, 72%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자료 1-2>의 자료를 보면 A국과 B국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이 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인 고독사 비율, 중증 치매 발병률, 알코올 중독자 비율, 우울증 비율은 B국이 A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료 1>은 가정 돌봄 비율이 높은 B국의 노인들이 A국의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2>는 2015년과 2025년의 금품 수수, 알선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대한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B국은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나, A국은 2020년에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한 결과 세 지수 모두 수치가 낮아졌다. 즉 국가가 일정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의 청렴도 향상이라는 공익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과 사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 ~ <자료 4>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 ~ <자료 4>를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자료 1>~<자료 4>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B: <자료 1>~<자료 4>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자료 4>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자료 4>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자료 4>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자료 4>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40점

2교시 · 문제 3

※ 제시문은 앞 문항(2교시 · 문제 1), 자료는 앞 문항(2교시 · 문제 2)을 참고하시오.

[문제 3] C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 중이다. 학생이 C국 시민이라면 이 정책 도입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i)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공과 사의 구분을 전제로 한 공익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

내가 C국 시민이라면 이 정책에 찬성할 것이다.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각 지위에 따라 추구하는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제시문 2>). 일회용품의 경우에도 공익을 고려한다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편리함, 위생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를 분리하고 강제력을 가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정책이 공적 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결과라면 시민들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제시문 4>). <자료 2>를 보면 A국도 국가가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직 청렴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과 사의 조화를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1>의 B국의 모습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국이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자료 1>의 노인 돌봄의 대상이 주로 무연고의 노인이 아닌 가정 내 관계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다양한 영역의 공익이 공과 사의 조화를 통해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정책을 통해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i)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통한 공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

내가 C국 시민이라면 이 정책에 반대할 것이다.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성은 공과 사를 관통하는 것이다(<제시문 1>).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죄책감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또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속에서 공과 사가 통합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제시문 3>). 일례로 시민 사회가 주축이 되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료 1>의 B국을 보면 가정 돌봄 비율이 상승하자 중증 치매 발병률과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고독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과 사의 분리를 통한 공익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2>의 A국의 모습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료 3>과 <자료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국 국민들이 자국의 행정절차가 투명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A국의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행정 효율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2020년에 도입된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가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직 청렴도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도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점

2025학년도

논술우수 언어형

1교시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시민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플라톤은 민중의 정치 참여에 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독성을 제거할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 민중의 어리석음, 경험 부족, 비전문성, 그리고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국가를 근본에서부터 썩먹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다수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정부형태를 민주정과 과두정이라는 두 가지 근본유형으로 나눴다. “가난한 다수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이고, 부유한 소수 귀족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과두정이다.” 과두정에서는 시민 몇 명이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반면, 민주정에서는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한다. 후자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무에 관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정부형태로 여겨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정부는 시민단의 전권 통치라는 원칙, 즉 시민들의 뜻이 언제나 법 위에 있고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칙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통치자의 수에 상관없이, 즉 정치체의 형식이 무엇이든, 공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올바른 정부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가 온갖 이해관계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하는 싸움판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여, ‘잘못된 정부’를 제거하고 ‘올바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아테네가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시민의 뜻에만 따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철학적 이성의 토대를 갖춘 법의 지배에 종속되기를 원했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가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정치인을 알아볼 판단력조차 결여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려서 무도한 선동가에게 권력을 쥐여 준다고 염려했다. 이 경우 국정이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쇠퇴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이른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 다수 시민의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결정을 대비시키는 전통은 플라톤에게서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나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이 전통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

[제시문 2]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가리키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그 단어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의제 원칙에 따라 선거로 정부와 입법부를 선출하긴 하지만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체제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역사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들을 거치면서 대의제, 투표, 선출된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드높여졌다. 보통선거권이 민주적 정부의 표준적 양상이 되었고, 이러한 대의제 체제에서 시민들은 종종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들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준다. 그들은 선출된 대표뿐 아니라, 훨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행정가, 관료, 공직자, 판사, 넓게는 국제기구들에게까지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 이로 인해 대표들과 각 분야 엘리트가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이 결국 국가를 ‘사실상의 귀족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문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투표권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모든 성인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되는 역사가 각종 운동과 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반과 입법부를 보통선거권에 따라 선출하는 제도가 다수 국가에서 확립된 후에는 민주정 내에서 대의제가 갖는 한계가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민주국가의 대의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뿐 아니라 내

용에서도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나온다. 선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선거운동이 종료되면 후보들은 소위 주권자들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투표가 정부의 방침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시민들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하는 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다수결 규칙을 따르는 한, 대표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서사에 대해 사람들이 품어왔던 환상이 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정치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서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의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정치체제의 집회가 분명 유리하다. 단위가 작을수록 참여의 잠재적 가능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큰 단위에서도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 국가에는 타국보다 크건 작건 일련의 독자적인 결사체와 조직, 즉 다원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나라가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기존의 대의제를 넘어서는 정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수용 문제가 불거지면 더욱 많은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끓지 않도록 오히려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잠재적 쟁점들을 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실성이 높은 정책 대안들을 따져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런 토론을 현실 정치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 보통의 시민이 지역사회나 국가 같은 단위 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면, 이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본적 신뢰가 크게 잠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의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정치적 신뢰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시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시문 3]

학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서로에게 후하게 대할 것이고, 이득만 보여주면 민간의 풍속은 각박해질 겁니다. 각박해지면 도리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위배하고 이익되는 일만 추구할 것입니다. 도덕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이 횡행해서 예의가 파괴되고, 간사한 사람들이 활개치며 나랏일에 참여하는 상황을 두고 인(仁)과 의(義)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 혼란의 싹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길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낳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여 군주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중시하며 예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속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학자집단은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군사가 죽을힘을 아끼지 않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군주 섬기기에 열중하여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실익과 녹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무리 인과 의를 부르짖었어도 백성들이 교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가와 묵가들은 속으로는 탐욕스러우면서 겉으로는 마치 욕심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는데, 이 또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리사욕을 가지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백성이 선하다고 전제하지도 않고, 저절로 착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성인(聖人)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본바탕은 바꾸지 못합니다. 내적인 자질이 없는데 글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스승과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이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백성을 엄격한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상벌은 성인이 시대에 맞는 옳고 그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서가 바로잡힌 세상과 혼란한 세상을 잘 관찰하여 정한 것입니다. 이를 따르기만 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정의감과 동정심만 앞서면 당장은 자신들이 가진 입을 것, 먹을 것 나누기

를 안일하게 즐기겠지만, 막상 흉년 등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서로에게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우선시하면 처음에는 욕심을 절제해야 하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간사한 꾀로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함부로 정치에 참여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혼란을 막고 백성들이 잘 따르게 만들면 백 배의 이익을 남기는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백성들도 기꺼이 세금을 낼 것입니다. 넉넉한 국가 재정으로 각종 제도가 완비되고 식량도 여유 있게 비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제시문 4]

법을 위반하려는 저희의 뜻에 대해 다들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만도 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한 1954년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촉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다른 법률을 의식적으로 어긴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역설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일부 법을 어기면서 다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적극 옹호할 것입니다. 사람은 정당한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고양하는 법은 정의로운 법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든 법은 부당합니다. 인종 분리는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분리법은 부당합니다. 분리된 사람들에게 거저된 열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법이란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규범으로서, 정작 다수는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법은 다수가 스스로 기꺼이 따를 규범을 소수에게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성을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소수에게 부과된 규범으로, 그 소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 분리법을 제정한 앨라배마(Alabama) 주 의회가 정당하게 잘 선출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앨라배마 주 전역에서는 흑인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흑인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정작 유권자로 등록된 흑인은 단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법이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그 적용은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금요일에 허가 없이 행진한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행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조례가 인종 차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권과 공공선을 위한 양심적이고 평화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도 광적인 분리주의자처럼 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 하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냥 억누르기만 해서는 소수를 억압하는 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을 믿고 만인을 위한 판단에 따라 부당한 법을 어기려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기꺼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법률을 어기고, 그 부당함에 대한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에 갇혀 기꺼이 형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야말로, 사실 법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예시 답안

제시문들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시민 참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1>은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이들은 공공선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경우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반면 철학자, 입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인간은 본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치 참여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민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성인과 같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피력한다. 두 제시문은 시민의 본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참여의 한계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시문 1>이 시민의 역량 부족을 근본적 이유로 강조한 반면 <제시문 3>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동기적 특성에 주목하고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의 지배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중 <제시문 2>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대표에 의한 정치는 일반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며,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통해 시민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을 피력한다.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책임에 근거하여 법이나 정책에 맞서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를 뜻한다. 시민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시문 2>가 대의제라는 정치 제도의 차원에서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언급하였다면, <제시문 4>는 시민불복종이 사회 발전과 제도 개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한계 및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 과 <제시문 2, 4> 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 과 <제시문 2, 4> 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3> 과 <제시문 2, 4> 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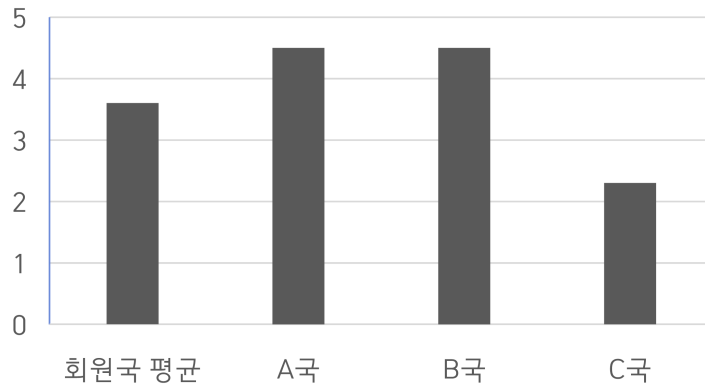
1교시 ·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1교시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본가치로 공유하는 전 세계 40여 국이 가입된 국제기구에서 매년 각국 시민들의 사회 활동 경험 및 사회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세 국가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¹⁾ (40점)

주1)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 C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자료 1> 사회 활동 경험²⁾



주2) 국민청원, 정책공청회, 서명운동,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하여 0(최저)~5(최고)점으로 나타냄.

<자료 2> 사회지표

항목	회원국 평균	A국	B국	C국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년)	9	4	12	9
정치 효능감 ³⁾	36	47	46	21
의견 대립 지수 ⁴⁾	34.1	55.3	39.3	40.5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 ⁵⁾)	3.2	6.4	3.1	2.3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인구 만 명당)	0.6	2.4	0.6	0.3
정부 효과성 ⁶⁾	1.5	0.9	1.7	2.3
좋은 나라 지수 ⁷⁾	0	-3	4	-2

주3) 시민 스스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의 강도(최소 0, 최대 50).

주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른 정도(최소 0, 최대 100).

주5) 사회적으로 표출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6)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최대 2.5).

주7)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을 종합한 회원국 간 비교 평가 지수(최소 -10, 최대 10).

■ 예시 답안

<자료 1>의 ‘사회 활동 경험’ 그래프는 각 국가에서 시민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A국과 B국은 모두 회원국 평균에 비해 시민 참여가 높은 반면, C국의 시민 참여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다. <자료 2>에 제시된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을 보면 회원국 평균이 9년인 것에 비해 A국은 4년, B국은 12년으로, A국과 B국은 시민 참여의 정도는 유사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어 참여의 성숙도가 다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2>의 사회지표를 보면, 시민 참여가 높은 A, B국은 C국에 비해 정치 효능감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문 2>에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정치 무력감에 빠지는 문제를 해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A국은 B국과 C국에 비해 의견 대립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높고,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는 회원국 평균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A국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의 특성이 <제시문 3>에 언급된 사리사욕만을 중시하는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좋은 나라 지수 역시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시문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회화 수준이 낮은 시민들의 참여는 국가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국의 좋은 나라 지수가 다른 두 국가 및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제시문 2, 4>).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은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이 회원국 평균과 A, B국에 비해 낮고 정부 효과성이 높다. 이로부터 시민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으로 인한 문제나(<제시문 3>) 이기적인 시민들로 인해 이해관계가 무질서하게 충돌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제시문 1>)은 적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갈등관리 비용 지출을 줄이고 나라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시민 참여가 낮은 C국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2>의 C국 의견 대립 지수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서 C국에서도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재된 갈등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좋은 나라 지수를 보면 C국의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 4>에 언급된 바와 같이 비록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갈등이 끓지 않도록 표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자료 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자료 2>를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자료 1>~<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B: <자료 1>~<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자료 2>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40점

1교시 · 문제 3

※ 제시문과 자료는 앞 문항(1교시 · 문제 1, 1교시 · 문제 2)을 참고하시오.

[문제 3] D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이 D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1)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시문 2>), 공공선 실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제시문 4>).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 2]의 A국 자료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 참여의 단순한 양적 확대는 사적 이익 간의 충돌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가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제시문 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제시문 4>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2]의 <자료 2>에서 정치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에서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시민 참여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D국의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로써 의무화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시문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문제들에 대해 의견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기 쉽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료 2>의 시민참여는 높지만 의견대립, 지역 내 기피시설 건립 반대가 많은 A국의 높은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과 낮은 ‘정부 효과성’은 이러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료 2>의 B국의 사회지표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B국은 충분한 정치사회화 교육을 받은 시민 참여가 보장된 국가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제시문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충분히 교육받은 시민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민 참여의 역기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면 공공선을 위한 선택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즉 D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해당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관련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점

2교시 · 문제 1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낱말들이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장은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텍스트(text)의 근간이 되는 자율적 언어 자체를 중시하거나 혹은 독자가 자신의 의도로써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은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도구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발화자는 특정한 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작가도 작품을 만들 때 그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독자는 마치 대화에서 청자가 그렇듯,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대화적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는 인물, 구성, 배경, 문체 등 여러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자율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하는 ‘의미’라는 개념에 근거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한다. 어떤 문학 작품이 독자들, 평자들, 또는 다른 작가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생각은 텍스트의 ‘의미’와 그 의미가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다. ‘의미’는 저자가 특정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고정된 뜻인 반면, ‘의의’는 그 의미와 감상자, 상황, 또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건 작품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와 그것이 놓여진 맥락과의 관계일 뿐이다. 의의는 항상 관계를 내포하지만, 작품의 의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축이다. 예를 들어, 시인이 쓸쓸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시를 썼으나, 어떤 독자가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시의 의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은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작품의 의미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오늘 공원에 간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수 있다. 한 작품을 해석할 때도 해석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작품에서 한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가 확정되려면 그 의미를 결정짓는 요인이 필요하고, 그 요인은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오독이나 작위적인 해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체(Nietzsche)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 개념을 통해 인간이 기존의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내면적 힘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나치당의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었고, 제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을 찬양하는 사상으로 오해되었다.

[제시문 2]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작품을 분석할 때 흔히 저자의 의도 내지는 ‘한 인간 저자의 총체성을 보편적으로 관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작품 밖에 있는 저자의 삶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작품 생산의 주체를 중시하는 관점은 해석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정신분석 이론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감정과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림 그 자체의 세부적인 재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감상자의 삶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감상자는 자신의 선험적 배경, 일상의 경험, 축적된 지식에 따라 작품에 다양한 시야로 접근한다. 호퍼(Hopper)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 도시의 한 모퉁이에 있는 식당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가 보이며, 식당 안에는 세 명의 손님과 한 명의 직원이 있다. 남성은 회색 중절모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식탁 위에 팔을 얹고 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은 붉은 머리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왼쪽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성은 뒷모습

만 보이고 어두운 정장과 모자를 쓰고 있다. 식당 직원은 흰색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을 본 관람자 중 과거에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림 속 조명과 인물들에서 쓸쓸함과 고독감을 읽는다. 그러나 외로움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 풍경을 묘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식당의 실내 모습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작품 감상에 투영되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원근법을 통해 만들어진 환영을 진짜처럼 느끼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원근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를 사실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예상에 맞춰 특정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듯, 그림 속 원근법이나 세부 묘사는 단순히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된다. 어떤 인식적 출발점과 경험적 토대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술 작품 해석의 본질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즉,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행위이다. 우리가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시문 3]

예술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추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작품에 숨어있는 상징이나 철학적 메시지를 파악하려 한다. 손택(Sontag)은 <해석에 반대한다>에서 상징적 내용을 추출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는 해석의 지배적인 방식이 오히려 예술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은 예술을 단순한 퍼즐로 만들어 그 미학적 힘을 앗아가 버린다. 손택은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하려면 그것의 형식을 수용하고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예술이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의 역사적 배경이나 작곡가의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음악을 듣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관객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발산한다. 손택의 관점에서,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접할 때 관객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해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주체라는 점에서 손택의 주장은 바르트(BARTHES)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제 우리는 글쓰기에 미래를 돌려주기 위해 글쓰기의 신화를 전복시켜야 한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바르트의 이 폭탄 같은 선언은 저자나 텍스트를 과대평가하며 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반기이다. 이는 문학 감상에서의 관심 대상을 텍스트에서 독자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텍스트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관객에 부여하고, 저자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바르트는 텍스트에 전통적으로 부여된 폐쇄된 의미체계를 비판하며, 관객이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바르트의 입장에서 텍스트는 독자와 관객의 독창적인 관점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열린 존재가 된다. 읽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 이해에 있어 관객에게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트는 창작자의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관객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손택은 해석 자체의 필요성에 도전하며, 예술을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두 사람의 관점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관객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예술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즉,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의 감상과 의미 창출에서 관객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감상자의 감정과 주관적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은 예술과 관객 간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제시문 4]

모든 작품은 창작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작가와 작중 인물의 삶과 그 시대를 반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작가가 작품의 소재를 고른다든지, 특정한 형식을 사용한다든지, 주제를 다룬다든지, 또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선택하는 따위의 문제는 작가의 삶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작가 특

유의 문학관이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작품을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넓게는 작가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또는 정치관,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문학관, 좁게는 그의 교육, 생활 수준, 가족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는 지극히 사사로운 습관이나 취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이 다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삶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공통되게 적용된다. 드가(Degas)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시대상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드가는 원래 파리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업을 잇기 위해 법률을 공부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1855년에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초기에 도덕적 메시지와 명확한 구도를 중시하는 고전주의 화풍을 따른 역사화를 주로 그렸지만, 1870년대 중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의 화풍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시력 악화를 겪으면서 어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그리던 대상과 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각적인 제약은 드가에게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강요했으며, 그가 그리던 인물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드가는 고전적인 역사화 속 귀족들 대신 현실의 인물들, 특히 파리의 하류층 여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작품에 깊이 투영된 것이다. 드가의 그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상은 발레리나들이다. 당시 파리의 발레리나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을 받던 하층 계급의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위해 고된 훈련을 해야 했으며 때론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견뎌낸 이유는 발레리나라는 삶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드가의 그림은 이러한 하류층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드가는 무대 뒤편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포착하여, 그들의 고통과 일상적인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는 드가가 단지 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소녀들의 삶을 깊이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드가의 파스텔화 기법은 그의 감정적인 접근을 더욱 강조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로 하류층 여성들의 고통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드가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경험—특히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공감—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예시 답안

예술에 관한 견해는 창작자(작가)의 의도와 배경을 중시하는 창작자 중심주의와 작품을 감상하는 수용자(독자)의 경험과 능동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수용자(독자) 중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제시문 1>은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가의 정신과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예술 작품에는 작가가 의도한 특정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작품과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의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텍스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독자나 다른 작가들이 작품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작위적인 해석은 니체의 ‘초인’ 개념을 악용한 나치당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제시문 4>는 예술작품은 창작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 창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정신적, 물질적 삶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작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드가의 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 드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예술로 승화시켰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공감은 예술 작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1>이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의도와 고정된 의미에 주목했다면 <제시문 4>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 및 배경, 사회적 상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제시문 2>는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이 예술 작품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 배경을 가진 사람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 작품은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 관객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바르트는 창작자의 입장이 아닌 감상자가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주목하며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감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감상자는 스스로 작품의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이며, 주관적 경험을 통해 작품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독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손택은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거부하고, 관객이 예술 작품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둘은 결국 감상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감상자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다. <제시문 2>가 예술 작품이 개인의 감정과 경험 및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면, <제시문 3>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수용자의 충만한 경험과 능동적인 태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예술 작품 감상 기준으로서 ‘창작자(작가) 중심주의’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창작자(작가) 중심주의’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입장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창작자(작가) 중심주의’ 입장과 ‘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을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40점

2교시 ·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2교시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하시오. (40점)

<자료 1>

아래 <자료 1-1>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두 예술 교육 프로그램¹⁾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1-2>와 <자료 1-3>은 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루어진 자기 평가와 전문가 평가 결과²⁾를 보여준다.

주1) 각 프로그램 당 50명의 어린이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음. 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두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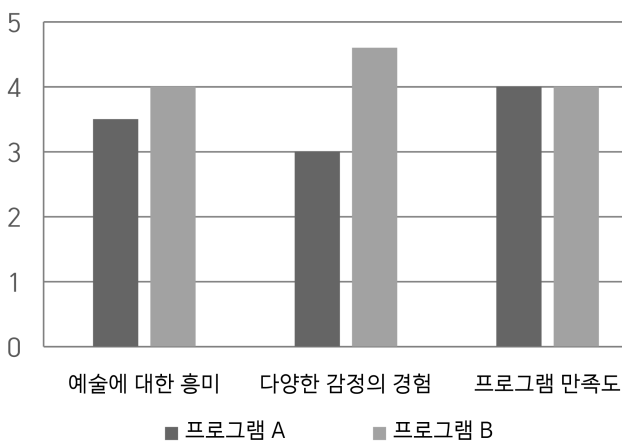
주2) <자료 1-2>의 자기 평가와 <자료 1-3>의 전문가 평가에서 각 항목은 5점 만점으로 평가됨(0점: 매우 낮음, 5점: 매우 높음).

<자료 1-1> 프로그램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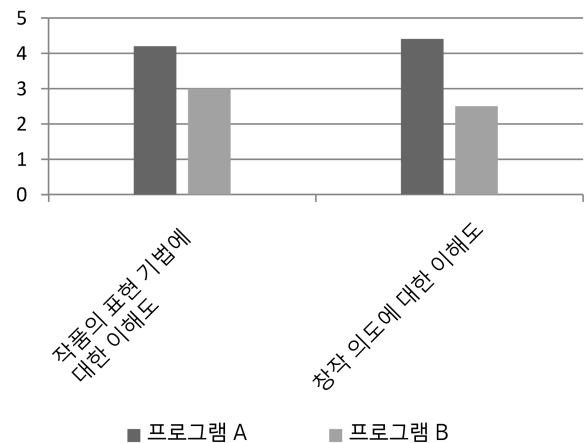
대상 예술 작품: 이중섭의 <소> 연작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도슨트(docent) ³⁾ 가 이중섭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역사적 맥락, 독특한 색채 사용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어린이들과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이중섭의 <소> 연작을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로 변환하여, 어린이들이 작품의 구성 요소,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

주3) 미술관에서 방문객들에게 작품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

<자료 1-2> 프로그램 참가자 자기 평가 평균



<자료 1-3>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평균



<자료 2>

박경리 작가의 <토지>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조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한 작품이다. 한 대학에 개설된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아래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자료⁴⁾와 표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서 많이 사용된 핵심 단어와 단어별 출현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공 A>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갈등	32%
자아	28%
무의식	16%
정체성	14%
기타	10%

<전공 B>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경제	30%
계층	26%
착취	20%
토지	16%
기타	8%

<전공 C>



핵심 단어	출현 비율
문화적	24%
상징	21%
구조	20%
주제	18%
기타	17%

주4) 왼쪽에 제시된 워드 클라우드에서 글자 크기는 해당 단어의 출현 비율에 정비례함.

<자료 3>

아래 그래프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연구 결과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⁵⁾ 참가자의 현재 정서 상태,⁶⁾ 자녀 유무를 물었다. 이후 참가자들을 A, B, C 세 조건에 각각 40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고,⁷⁾ 각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어린아이의 얼굴 사진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와 현재 느끼는 정서 상태를 다시 물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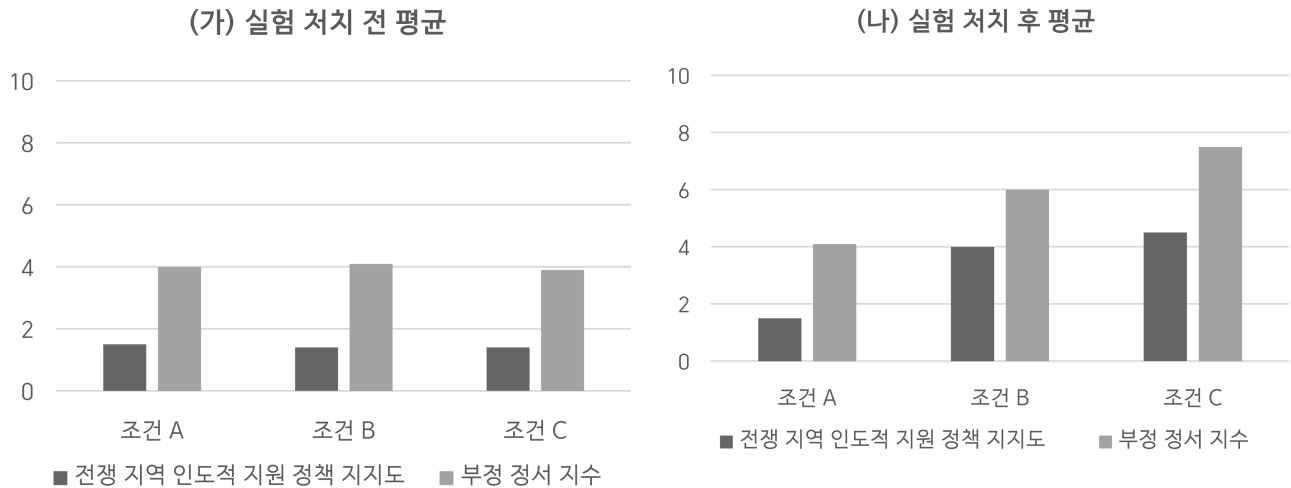
* 조건별 사진 감상 방법:

조건 A (400명):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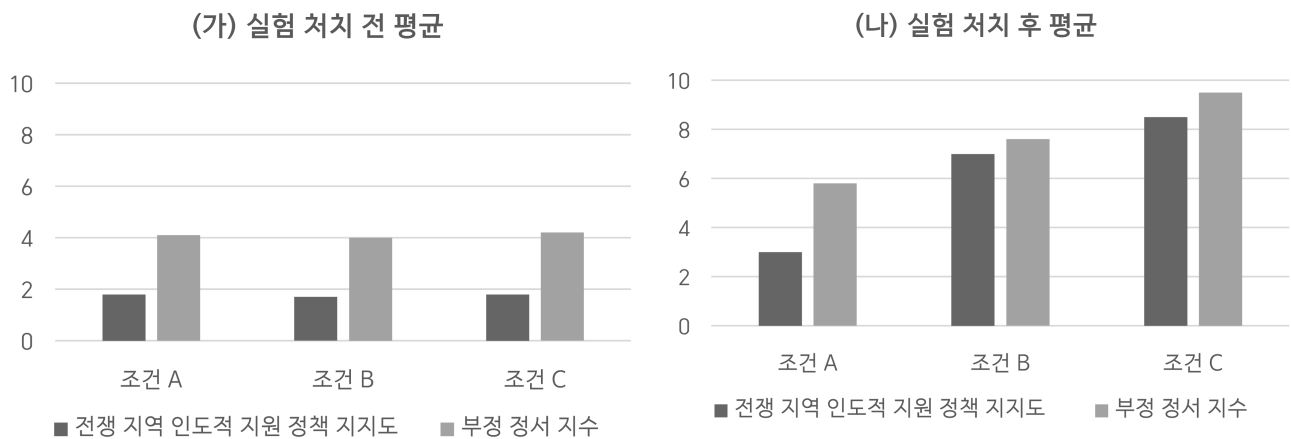
조건 B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임을 알려줌.

조건 C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라는 정보, 그리고 사진작가 역시 전쟁고아 출신임을 알려줌.

<자료 3-1> 자녀가 없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자료 3-2> 자녀가 있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주5) 0에서 10까지로 측정하였고, 수치가 높을수록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함.

주6) 질문 시점에서 슬픔, 분노, 불안, 공포의 네 가지 부정 정서를 0에서 10까지로 측정한 값임.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가 강함을 의미함.

주7) 세 조건 간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주8) 사전 설문 문항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결과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다양한 주제의 문항들을 추가로 질문하였음.

■ 예시 답안

<자료 1> ~ <자료 3>은 창작자 중심주의와 수용자 중심주의 양측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1>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와 수용자 중 어느 입장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자료 1-1>의 프로그램 A는 작가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배경 등을 설명하며 작가의 배경과 의도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1>과 <제시문 4>에 나타난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프로그램 B는 어린이들이 작품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며, 작품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 <제시문 3>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자료 1-2>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의 자기 평가 결과를 보면 예술에 대한 흥미나 다양한 감정의 경험 점수가 프로그램 B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작품의 능동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강조하는 수용자 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료 1-3>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보면 작품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도 점수 모두 프로그램 A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 2>는 워드 클라우드 자료와 표를 통해 <토지>라는 작품을 읽은 학생들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 활용된 핵심 단어와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공별로 학생들의 개별적 경험과 지식, 관심 분야가 다르고, 그에 따라 동일한 작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용자의 배경에 따른 능동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자료 2>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토지>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이 워드 클라우드에 나타난 전공별 작품 해석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를 임의로 해석하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 3>은 조건 A, B, C에 따른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 및 정서 상태의 변화를 자녀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료 3-1>, <자료 3-2>에서 인도적 정책 지지도, 부정 정서 지수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모두 $A < B < C$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작품에 대한 지식과 작가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작품의 진정한 의미와 작가의 의도가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창작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한편, <자료 3-1>보다 <자료 3-2>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모든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자녀가 있는 집단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사진과 작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들었을 때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 전후 정책 지지도의 변화량이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자녀 유무라는 수용자의 개인적 차이가 정서를 넘어서 정책 지지도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적 경험과 수용자의 특성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료 3>은 수용자 중심주의를 지지한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B: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 <자료 2> 및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40점

2교시 · 문제 3

※ 제시문과 자료는 앞 문항(2교시 · 문제 1, 2교시 · 문제 2)을 참고하시오.

[문제 3] 최근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여 공연한 연극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연극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새로 구성하여 제작되었고,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극에서 원작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연극이 원작을 시의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은 이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1) 재해석을 비판하는 입장(창작자(작가) 중심주의)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통해 예술 작품에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만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 작품은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별개로 해석할 수 없다.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와 경험 및 창작 배경 등을 고려하여 작가가 남긴 작품 속 메시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며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드러나지 않게 재구성한 것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예술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올바른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작위적 해석의 문제점은 <제시문 1>의 니체가 사용한 ‘초인’ 개념을 나치당이 악용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재해석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 그 시대의 사회상과 작가의 의도를 살리는 수준에서 연극을 기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와 창작 배경을 고려한 예술 작품 이해의 필요성은 [문제 2]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에서는 이중섭의 생애와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작품의 표현 기법과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료 3>에서도 사진 작가의 배경과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작품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자료 2>에서는 전공에 따라 <토지>라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워드 클라우드를 근거로 작가 중심주의를 비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는 작가와 시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 <토지>가 가진 작품 고유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작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 속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원작을 파격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공연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재해석을 옹호하는 입장(수용자(독자) 중심주의)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통해 개인의 감정과 경험에 따라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관객의 충만한 경험과 능동적인 태도가 예술 작품 감상에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술 작품의 해석은 창작자가 아닌 독자의 몫이며, <제시문 2>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자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동일한 작품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재해석한 것은 수용자들의 가치관과 시의성을 반영하여 그들의 눈으로 작품을 해석한 능동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중심주의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의 장점은 [문제 2]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에서는 어린이들이 이중섭의 작품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흥미와 다양한 감정의 경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예술을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손택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자료 2>에서는 <토지>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 속 핵심 단어와 출현 빈도가 전공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작품도 전공자의 배경 지식과 관심,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한 것을 원작을 왜곡했다고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적 정책 지지도와 부정 정서 지수의 실험 전후 변화량이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3>도 개인적 특성과 경험이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물론 이렇게 수용자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제시문 1>은 니체가 사용한 ‘초인’ 개념을 나치당이 악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작위적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로 예술 작품의 주관적 해석이 항상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시의적절하게 해석하고 재구성한 시도는 존중되어야 하며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원작에 대한 파격적 재해석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점

2024학년도

논술우수 인문계

1교시 · 문제 1

[문제 1] <제시문1> ~ <제시문4>는 인간 사회의 운용 원칙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자연에서 얻고 자연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때로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약을 부과했지만 인간은 이내 그것을 극복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와 같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고 분화했으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지 혹은 자연이 인간의 이용대상일 뿐인지를 놓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발달된 산업사회를 인류가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후로, 철저히 도구적인 자연관과 극단적인 생태주의는 양자 모두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부족한 관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물론 경제 발전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이 자정능력을 일부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대단히 큰 비용과 긴 시간이 든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인류가 산업사회의 이점을 모두 포기하고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간다”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진퇴양난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균형과 정교한 계산이다.

이 문제의식을 산림 관리에 적용해보자. 산림정책의 목적은 숲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야생지에 사는 야생동물의 은신처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도 아니다. 산림의 관리와 이용은 단순히 중립적인 기술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나름의 윤리적 입장과 지침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산림이 공동체의 선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함이 옳다. 즉 산림이 황폐화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부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산림을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임학(林學)이다. 다시 말해 임학은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동시에 산림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산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생산해내도록 만드는 학문적 기술이다.

산림 전문가의 일차적인 관심은 인간이 산림을 가능한 영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림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 자원에도 이러한 통찰과 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연 보전운동은 우리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의 사회적 효용을 위해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애초에 그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자연을 이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놓아두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맞게 자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무분별한 자원 채취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연 보전운동은 자연 자원의 이용이라는 문제에서 인간이 지속가능한 방식을 취하면서도 자원 이용을 통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임학의 관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제시문2]

4차 산업혁명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이 인간과 사회에 제공하는 편익은 매우 크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기술혁명은 스마트팩토리라는 생산방식으로 기존 작업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러한 신기술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직업군을 다수 창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2030년까지 관련 분야 일자리 500만 개가 새로 창출되지만, 이로 인해 740만 개가 대체되어 결과적으로 2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직업활동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까지 위협할 수 있다. 직업이 인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직업 생태계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직업 생태계의 변화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저평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교통이나 숙박과 관련된 공유 서비스는 다수의 행복과 편리함을 증진하는 선효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 자신의 재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등장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로 인한 직업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와 자율성, 사회적 관계마저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직업윤리는 외부의 영향이나 사회변화에 좌우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분명 기존 직업 생태계에 여러 위기를 가져왔지만, 이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법칙을 세우고 지켜나갈 때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은 이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간의 선한 의지를 따르는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이익이나 직장의 이윤보다는 오로지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인간은 자율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의 편익을 도덕적 규범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도 기술의 진보 앞에 인간은 계속 도전을 받아왔다. 앞으로도 고용 형태는 계속 변화하고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고용시장은 개인의 역량보다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의 고용시장은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편익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직업 불안정에 따른 인간소외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만큼 미래사회의 직업윤리는 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인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시문3]

사형은 궁극적 형벌의 표상으로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법치국가에서 형벌은 특정 계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라는 수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행위규범이 있다는 관념, 그리고 그 규범에 따라 올바른 행위를 권장하고 잘못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관념이 일반적인 법 감정의 토대를 이룬다. 이 법 감정의 사회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형벌은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인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형벌은 형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법치국가에서 유용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형벌은 사회적 기능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필요악이다. 형법의 목적은 범죄를 선택한 구성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벌의 사회적 이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더 커야만 형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공익을 고려하여 형벌의 이익과 해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적 평가가 필요하며, 그러한 평가 결과는 형량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해악보다 그 이익이 더 크다면 사형 존치는 필수불가결하며 사회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타당한 도구로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개별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양적·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행위결과와 총합에 따라 범죄행위의 해악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특정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경우에는 그 범죄자를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초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형 폐지는 합당하지 않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적시한 바와 같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불가역적으로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지만, 이성적인 사법제도로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형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사형제도의 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형제도는 그 상징적 가치만으로도 존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제시문4]

17세기 유럽의 자연법 전통은 실정법의 도덕적 토대를 탐구하는 사고의 틀이다. 자연법 세계관의 핵심은 바로 자연이 인간에게 의무들을 부과했으며 이 의무들이 최초의 자연법률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간은 기본적인 의무들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추가적인 의무를 진다. 자유의지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동물이 아닌 인간만의 특권이며, 이로부터 모든 세속 권력의 연원이 도출된다. 의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라”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보존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또한 자신의 생명보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신을 보존할 의무에서 의식주 등 필수품에 대한 소유권이 도출되고, 이 소유권을 존중하고 수호할 의무가 추가적으로 도출된다.

자연법학은 의무들의 체계이며 이 체계에서 권리는 부차적이기에, 자연법학자에게 생명은 권리가 아닌 의무의 문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만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연이 낳은 존재인 타인의 신체와 재산도 존중해야 한다. 이 의무들로부터 모든 다른 자연법을 에워싸는 으뜸가는 준칙이 도출된다.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마라.” 이는 내가 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격받기 싫다면 나도 남의 신체와 재산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의무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존중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관점이 바로 17세기 자연법학의 토대를 이룬다.

근대 유럽의 실정법 체계 기저에 놓인 사상적 토대는 이와 같으며, 이 의무 체계 속에서 개인들의 구체적인 충돌을 조정하고 위반 사항을 감독 및 처벌하는 것이 세속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성문법이든 관습법이든 통치에 필요한 실정법을 정의롭게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두어야 한다. 이 일에 실패한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존속할 가치가 없는 권력체로 전락하게 된다. 자연법학자의 관점에서는, 일국이 얼마나 부강한지 여부 또는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무관한 문제다. 통치자의 정통성은 오롯이 자연법에서 도출된 의무 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실정법의 설계와 운용 능력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 예시 답안

각 제시문은 화자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가 되는 윤리 사상은 의무론(<제시문 2>와 <제시문 4>)과 결과론(<제시문 1>과 <제시문 3>)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론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며, 만약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도덕 법칙)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본다. <제시문 2>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직업 생태계의 변화가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불안정과 소득 양극화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에 기반한 의무론적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간 소외와 갈등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직업윤리를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4>는 국가 권력의 근거가 되는 실정법의 토대가 자연법이라고 설명한다. 실정법은 자연법이 명한 의무를 온전히 담아내고,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법 감정과 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명한 의무를 실현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자연법이 자기 보존, 신체와 재산에 대한 존중과 같은 보편적 의무를 자연이 인간에게 부과하였으며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론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고 본다. 이 관점을 따르는 공리주의에서는 최대다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이다. 이 관점에서는 의무론과 달리 좋은 결과의 도출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제시문 1>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원 활용의 원칙을 규정하는 윤리관으로서 공리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기존의 도구적 자연관이 무분별한 자원 활용으로 인해 환경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원 활용의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보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극단적인 생태주의도 편익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윤리관에 따라 공동체의 선과 복리를 최대화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정교한 계산을 통해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지하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3>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는 형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형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공복리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형량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형 제도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해악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번	- 채점 포인트 ① 의무론과 결과론(공리주의)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의무론과 결과론(공리주의)의 각 입장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의무론과 결과론(공리주의)의 두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만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3>과 <제시문 2, 4>를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40점

1교시 ·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1교시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자료1>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2>와 <자료3>이 각각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자료에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40점)

<자료1> 사회규범의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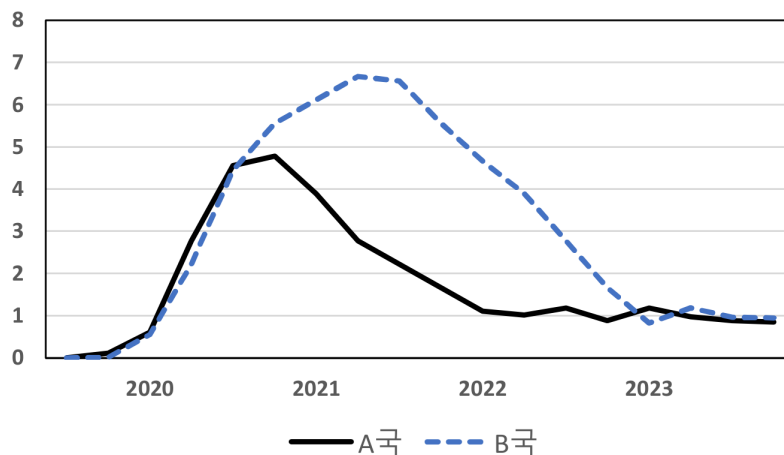
문항		국가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
1	피해자가 없는 규칙 위반은 문제될 것이 없다.	A국	28.3	42.1	15.0	8.3	6.3
		B국	3.5	7.0	18.4	35.3	35.8
2	흉악범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경미한 규칙 위반은 용인할 수 있다.	A국	35.0	27.3	18.0	11.2	8.5
		B국	7.0	14.6	29.8	27.5	21.1
3	선의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	A국	6.0	11.4	17.0	38.1	27.5
		B국	27.0	25.8	22.2	13.9	11.1
4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A국	12.0	20.4	28.0	22.6	17.0
		B국	34.0	26.2	17.4	13.3	9.1
5	내가 아프더라도 노약자석은 노약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A국	15.8	18.0	20.7	27.0	18.5
		B국	36.0	41.9	14.0	6.8	1.3

주1) 본 설문조사의 결과값은 각 문항 응답자 중 해당 척도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2> 코로나19 감염률 및 팬데믹 기간 중 경제지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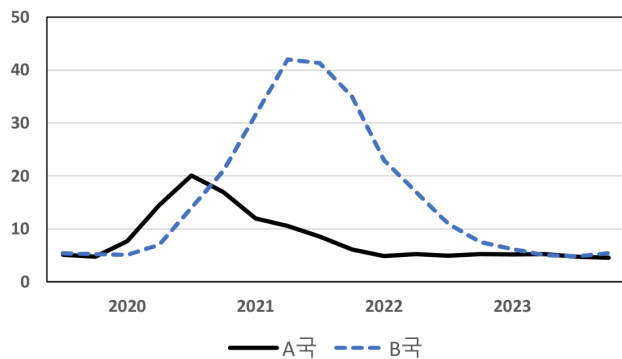
A국은 2019년 4분기 코로나19 감염병 발발에 대응하여 ①엄격한 봉쇄정책을 시행하였고 ②응급의료 인력 대부분을 코로나19 병동에 이전 배치하였으며 ③음압병동을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였다. 반면 B국은 A국과 같은 3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아래 <자료2-1> ~ <자료2-3>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두 국가의 정책 차이에 따른 결과와 경제지표들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2-1> 코로나19 신규 감염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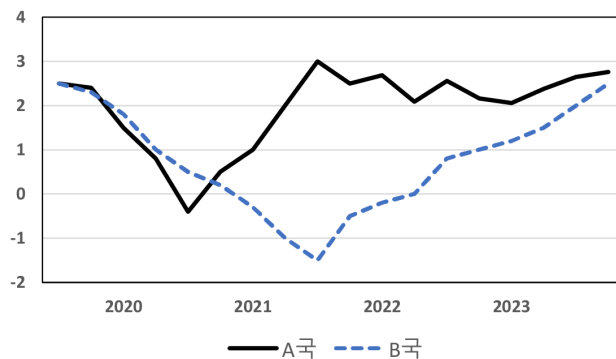


주2) 코로나19 감염률은 해당 기간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비율(%)임.

<자료2-2> 중소기업 폐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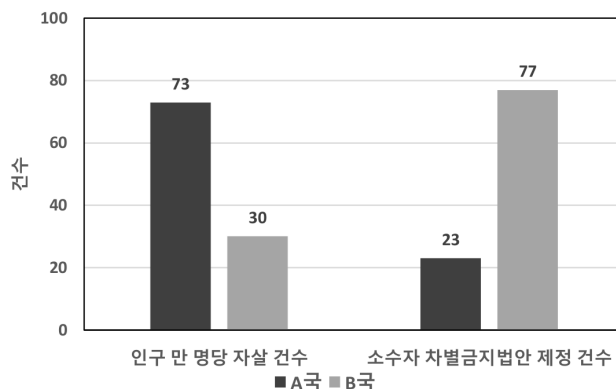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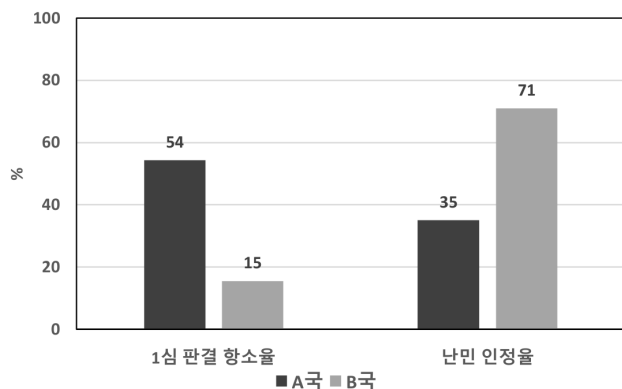


<자료2-3>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주3) 중소기업 폐업률은 해당 기간 중소기업 수 총계 대비 폐업 중소기업 수의 비율(%)임.

<자료3> 주요 사회지표 비교



주4) 1심 판결 항소율은 연간 1심 판결 인원 대비 항소 인원의 비율(%)임.

주5) 난민 인정률은 연간 난민 심사 건수 대비 난민 인정 비율(%)임.

주6) 소수자 차별금지법안 제정 건수는 최근 5년 간 국회가 제정한 소수자 차별금지 관련 법안 건수임.

■ 예시 답안

<자료 1>에서 사회규범의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결과론에 가까운 1, 2번 문항에 더 많이 찬성한 A국 국민은 공리주의 윤리관을, 그리고 의무론에 가까운 3, 4, 5번 문항에 더 많이 찬성한 B국 국민은 의무론적 윤리관을 사회 운용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문제 1]의 결과론적 윤리관을 지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A국은 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해 3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했다. 그 덕분에 A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B국에 비해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을 현저히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았지만, 이후 낮은 감염률과 함께 폐업률도 B국에 비해 낮게 유지되는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낮은 폐업률과 감염률에 힘입어 A국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도 신속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소수 국민의 피해를 감안하면서도 적극적인 공리주의 정책을 편 결과다. 그러므로 A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문 1, 3>의 결과론적 윤리관을 지지할 수 있다.

<자료 3>은 [문제 1]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지지한다. 난민 인정률, 자살 건수, 소수자 차별금지법안 제정 건수를 볼 때, B국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생명을 존중할 의무,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할 의무를 중시한다. 1심 판결 항소율 자료는 항소심 단계에서 판결 기준이 사회적 편익 계산에 따라 바뀔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비교하여 보여주며, B국의 항소율이 낮다는 것은 의무론적 윤리관이 지배적 이어서 판결의 일관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료 3>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국이 공리주의적 성향 때문에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제도의 신뢰도가 낮고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시문 2, 4>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지지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번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 ~ <자료 3>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 ~ <자료 3>을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B: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 C: 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 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 과 잘못 연결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 ~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 ~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40점

1교시 · 문제 3

※ 제시문은 앞 문항(1교시 · 문제 1)을, 자료는 앞 문항(1교시 · 문제 2)을 참고하시오.

[문제 3] C는 대규모 자선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부산에 가는 길이다.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에 오르던 중, C는 소지품을 모두 잃어버려서 열차에 탑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 그때 C는 열차 바닥에 떨어져있는 누군가의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이 지갑에는 열차 탑승권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C는 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급히 탑승권을 재구매하고 자선행사에 가야 할지, 아니면 자선행사를 취소하고 지갑을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학생이 C라면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1) 지갑을 분실물 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의무론)

내가 C라면 지갑을 분실물 센터에 신고할 것이다. 열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절도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률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자선행사 참석이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예외적으로만 적용될 사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의무만을 고려한 나의 선택으로 인해 자선행사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편익이 명백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서 주장하듯,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목전의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 준칙을 상황에 따라 바뀌도 된다고 전제해버리면 <자료 3>의 1심 판결 항소를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2) 탑승권을 재구매하여 자선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결과론)

내가 C라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탑승권을 재구매할 것이다. 탑승권을 재구매함으로써 발생할 피해는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안타까운 심정과 일정 수준의 현금에 불과하지만, 내가 분실물 센터에 지갑을 신고함으로써 대규모 자선행사를 취소한다면 다수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이 강조하는 정교한 편익 계산에 따르면, 선택으로 인한 이익과 해악을 고려할 때 해악보다 이익이 더 큰 선택이 옳바르다. 따라서 탑승권을 재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절도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의무만을 강조하면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도덕률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번	- 채점 포인트 ① 주어진 두 방안 ‘분실물 신고’와 ‘자선행사 참석’ 중 하나에 대한 선택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상반되는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두 방안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두 방안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두 방안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두 방안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두 방안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점

2교시 · 문제 1

[문제 1] <제시문1> ~ <제시문4>는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1]

소비는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이자 기호(記號)가 되며 소비하는 사물 그 자체도 기호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실용적 사용가치를 지닌 재화로서의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기호를 소비한다. 욕망, 계획, 필요, 열정은 기호로 추상화 또는 물질화되며 상품으로 구매되고 소비된다. 우리는 상품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기호, 텔레비전의 기호, 자동차의 기호를 소비하고, 성(性)과 권력의 기호를 소비한다. 소비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안락함, 행복, 사랑, 우아함이라는 기호를 취한다. 최신형 휴대전화나 자동차처럼 더 새롭고 나은 상품을 갖는 것은 그 상품에 담긴 행복의 기호를 구매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상품 구매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이 표현하거나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회적 지위나 계층적 차이에 관한 욕구를 반영한다. 물건의 구입과 소비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 위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을 타인과 구분 짓는 기호로서의 사물을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사물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이에 따른 구별짓기를 통해 소비되는 것이다. 소비를 통해 개인은 사회계급의 수직적 서열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보상받기도 한다. 중간계층과 하위계층에게 지위와 신분, 위세를 의미화한 상품의 소비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난 계층적 차이를 극복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의 소비를 통해 중간계층과 하위계층은 그들의 실존적 상실감을 회복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는 산업사회의 특성과도 연관된다. 과거 생산의 시대에는 개인이 사회 전체의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소비의 시대에는 오히려 사회 전체가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산업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기호로서의 상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상품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그 자체는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으로 본질적으로는 개성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색깔, 모양, 장식품, 부속품 등 상품의 외부적인 특징을 바꾸거나 상품에 부차적인 것을 덧붙여 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차적이고 특수한 차이가 유행을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특히 광고와 미디어는 이 과정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자동차 광고 속 스타의 이미지, 그 상품이 담고 있는 젊음,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구매한다. 특별한 이미지가 담긴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의 광고와 미디어 속 이미지는 기호 소비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제시문2]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시민으로 일컫는다고 할 때, 이는 자신이 주인으로서 지배자의 위치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시민성을 발휘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민권이란 시민됨의 자격과 소속,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출처인 법적 지위와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 반면 시민성은 시민의 자질과 덕성, 시민행동과 시민의식에 관한 것을 일컫는다. 근대 이후 세속적인 시민권의 확대와 규범적인 시민성의 발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 시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왔다. 우리 사회도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시민권 확대를 추구해 왔으며, 요즘은 시민권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한 시민성의 함양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시민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사회적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덕목인 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공동선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을 사회 구성원으로 자각하고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도덕적·시민적 쟁점에 관한 명확한 사고능력을 지니고, 그에 따라 행동할 도덕적 책무와 인격적 책임감을 갖는다. 시민은 개인의 권리와 시민의 권

리를 자각하면서도 행위주체로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시민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용과 시민적 책임을 중시하는 도덕적인 인간이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법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행태가 만연하였다. 오늘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시민활동의 일환으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이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과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제시문3]

사람은 누구나 귀와 눈이 있다. 그런데 들리고 보이는 현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귀와 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인간 본성과 감정 사이의 미묘한 작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선(善)과 악(惡)의 두 길로 갈라지기 전에 미세한 감정적 움직임이 마음에 나타나는데, 이는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단과 칠정을 공(公)과 사(私)로 나누면 사단은 공적인 것이고 칠정은 사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사단의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불선한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도덕적이며 공적인 것이다. 하지만 칠정은 나에게 거슬리는 것에 분노하고, 악취를 싫어하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바라는 것이기에 나의 사적 영역과 관계된 것이다.

칠정의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함, 미워함,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게 되며, 이로 인해 배우지 않고도 칠정의 감정이 나오게 된다. 자칫 분별력 없이 감각기관의 욕망에만 이끌리게 되면 칠정은 악에 이르기 쉽다. 그러나 칠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도덕적인 성인(聖人)과 군자(君子)도 인간이기에 이 칠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들도 배고픔과 추위를 느낀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죽음과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은 도덕적인 성인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인과 군자는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여 멈출 줄 안다. 오히려 자신의 칠정의 감정을 확장하여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다. 누구나 칠정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자신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미워하는 것을 자신도 미워할 수 있다. 이는 사적 감정인 칠정이 지닐 수 있는 공적인 속성이다. 여기에서 공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라도 상대에 대해, 세상에 대해 자기와 하나의 몸인 것처럼 동일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말한다. 이 공적 감정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을 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다. 이는 성인과 군자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보통 사람들의 사적 영역은 가까운 데 그쳐서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정도에만 머문다. 반면 도덕적인 성인의 사적 영역은 멀리까지 이르러 온 인류에 대한 사랑에까지 미친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상대와 나, 사물과 나 사이에 구분이 없어서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과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질병과 기아, 추위에 시달리다 죽을 지경에 이른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게 된다. 이처럼 칠정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지만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적 감정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먹는 기쁨, 해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굶주리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에 연민을 느끼고 자기 일처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적 감정으로서 칠정의 면모이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이상적인 정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상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통치자가 자신이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확장시켜 백성들과 이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적 감정을 공적 감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시문4]

불우한 성장배경에서 자수성가한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가 1928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개인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제의 노동자가 불굴의 의지와 능력으로 내일의 자본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 자립, 경쟁, 능력주의를 강조한다. 개인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때, 이러한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어 논리를 발전시켰다. 한편으로 그들은 인간의 개별성을 근거로 재산과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이 개인의 내재적 차이에 따른 자연적이며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이러한 주장을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비례적 관계의 관점에서 보편적 정의의 원칙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개인에 중심을 두고 개인의 자발성, 독립성, 자유 선택과 같은 덕목을 칭송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경제 영역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 제도는 외부적 제약으로 인식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상태에서 인간은 여전히 개인이다. 인간의 행위와 열정은 개별적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따른다. 산소와 수소의 단순한 합이 물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함께 모였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속 인간은 개개인의 법칙으로부터 도출되고 또다시 개개인으로 귀착되는 특질을 지닌다. 사회적 상태에서 개인의 심리는 도덕적으로 완결된 상태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자체의 법칙을 지닌다. 따라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이나 자연에 대해 갖는 모든 우발적이고 외부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본질적으로 인간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된 자족적·독립적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며, 스스로 선택을 하며, 자기 나름의 믿음과 판단을 형성한다.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족성, 분리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상호 존중의 원칙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생명, 자유, 재산 등 상이한 차원에서도 개인의 이성, 의지 및 자율성을 행사하고 계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 예시 답안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견해는 크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4>는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제시문 2>, <제시문 3>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 1>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에 담긴 특별한 기호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남들과 구분하며, 자신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때로 소비는 사회적 지위나 계층적 차이를 극복하는 시도가 되는데, 특히 하위계층은 기호의 소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실존적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개성의 표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연결된다. <제시문 4>는 개인의 자유와 자립,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인간의 개별성을 근거로 하는 개인주의를 옹호한다. 재산과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은 내재적 차이로 인한 자연적이고 정당한 결과이며, 사회 제도는 외부적 제약이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본질적으로 인간을 외부세계로부터 분리된 자족적, 독립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다양한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 <제시문 1>은 소비의 행태적 측면에서, <제시문 4>는 인간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각각 옹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는 지금까지 기본권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권이 확대되어왔지만 이를 뛰어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덕목인 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시민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관용, 도덕적·시민적 쟁점에 관한 명확한 사고와 태도, 도덕적·인격적 책임감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제시문 3>은 칠정(七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감정인데, 분별력 없이 사적 감정에만 치우쳐 욕심을 추구하면 악에 이르기 쉽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사적 감정인 칠정을 확장하여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했을 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실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성인과 군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도 사적 감정을 확장하여 공적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입장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2>는 시민성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시문 3>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각각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1	- 채점 포인트 ① 삶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입장과 ‘개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입장과 ‘개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 입장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입장과 ‘개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제시문 4>와 <제시문 2>, <제시문 3>을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40점

2교시 ·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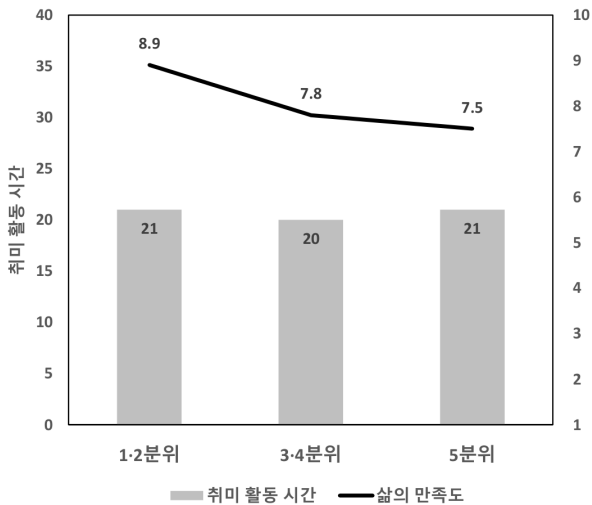
※ 제시문은 앞 문항(2교시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A와 B 두 국가에 관한 <자료1> ~ <자료2>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A국과 B국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자료에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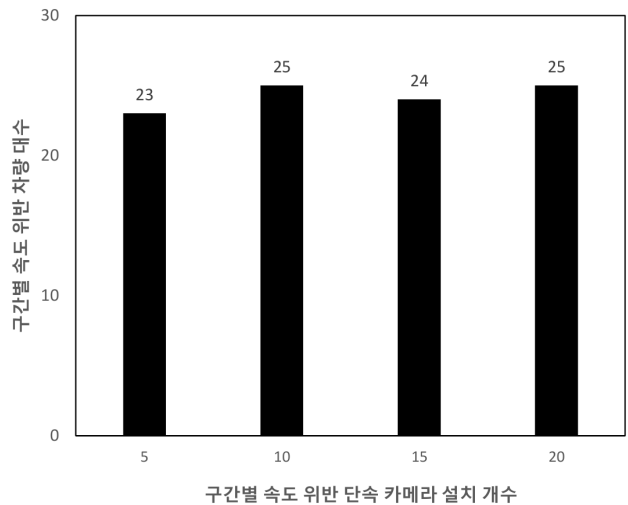
<자료1> A국과 B국의 주요 사회 및 경제 지표

	A국	B국
초·중·고교 학교교육과정 내 민주 시민 교육 편성비율(%)	15.4	73.7
공익 사회단체 참여율(%)	31.8	78.6
국가 창의성 순위(OECD 38개 회원국 중)	7위	29위
공공기관 혁신 지수(1=매우 낮음, 10=매우 높음)	8	3
창업 다양성 지수(1=매우 낮음, 10=매우 높음)	7	2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45.9	77.2
퇴직 후 사회봉사 참여율(%)	23.3	57.4
쓰레기 분리수거율(%)	63.2	90.6
원천기술 개발자 소득세율(%)	15.3	30.7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 순위(OECD 38개 회원국 중)	3위	27위

<자료2-1> A국의 취미 활동 행태



<자료2-2> B국의 운전 행태



주1) <자료2-1>은 A국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를 반영함.

소득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한 것으로, 5분위는 최상위 20%를 나타냄.

취미 활동 시간은 한 달 평균 개인이 취미 활동에 쓰는 시간을 말함.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임.(1=매우 낮음, 10=매우 높음)

주2) <자료2-2>는 B국 고속도로 50km 구간별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개수와 각 구간별 통과 차량 1,000대당 일 년 평균 속도 위반 차량 대수를 나타냄.

■ 예시 답안

한 국가가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회 경제적 제도와 국민들의 행위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자료 1>에서 B국은 A국에 비해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비율이 높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공익 사회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며,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며, 퇴직 후에도 사회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높은 도덕 수준을 보인다. 이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강조하는 공감, 관용, 공동선, 시민성, 공적 감정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B국은 ‘개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A국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어져 다양한 창업 활동이 보장되고, 독창적인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공공기관 혁신 등의 정책과 병행해서 전체적인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료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자료 2-1>에서 A국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높음에 관계없이 취미 활동 시간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취향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취미 활동을 통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으며, 특히 중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위계층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적 차이를 소비 활동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제시문 1>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자료 2-2>에서는 구간별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개수와 상관없이 속도 위반 차량 대수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B국 사람들이 평소에 삶의 가치를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함을 보여주며, <제시문 2>에서 강조한 시민성이 발현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A국의 해당 사례들은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을, B국의 해당 사례들은 ‘개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각각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2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 A: 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 B: 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 C: 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D: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된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E: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자료 1>, <자료 2-1> 및 <자료 2-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F: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40점

2교시 · 문제 3

※ 제시문은 앞 문항(2교시 · 문제 1)을, 자료는 앞 문항(2교시 · 문제 2)을 참고하시오.

[문제 3] 민간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R&D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맞바람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인 최첨단 풍력발전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K씨가 소유한 섬 주변 바다에 이 설비를 설치할 경우 K씨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씨가 개발한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바닷바람의 경로 변화에 따라 주변 지역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만약 학생이 K씨라면 새로 개발한 발전 설비를 설치할지 아니면 철회할지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예시 답안

<선택 1> 발전 설비 설치(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

내가 K씨라면 나는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것이다.

<제시문 4>와 <자료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은 자신의 개별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K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많은 돈을 투자한 설비로부터 수익 창출을 통해 마땅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많은 돈을 투자한 R&D 사업의 성공으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문제 될 이유는 없다.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변 생태계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주장하는 대로 개인이 분별력 없이 자신의 욕망에만 이끌리게 되면 공공에 해가 초래된다는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계 변화 가능성도 불확실한 것이고 그 영향력 또한 확실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율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개인의 이성, 의지 및 자율성을 행사하고 계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자료 1>과 <자료 2-1>에서 A국의 해당 사례들을 보더라도 삶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최대화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삶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선택 2> 발전 설비 설치 철회(개인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내가 K씨라면 나는 발전 설비 설치를 철회할 것이다.

<제시문 3>에서 강조한 것처럼 분별력 없이 자신의 욕망에만 이끌리게 되면 악에 이르기 쉬운데, K씨의 발전 설비 설치로 인해서 주변 지역 생태계가 불안정해져서 공공에 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3>에서는 사적 감정이 공적 감정으로 확장되고 상대방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강조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성을 <제시문 2>에서 강조하였다. 이는 <자료 1>과 <자료 2-2>에서 B국의 구체적인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K씨의 개인적인 이득 추구는 전체 사회의 이득 추구와도 연결되어야 하는데, 발전 설비 설치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주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터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K씨가 사회적 책무를 인지하고 시민성을 지니고 있다면 발전 설비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에서 말한 것처럼 K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많은 돈을 투자한 설비로부터 수익 창출을 통하여 마땅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2>에서처럼 K씨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시민성을 자각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 1>과 <자료 2-2>에서 B국의 해당 사례들을 보더라도,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책무를 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번	- 채점 포인트 ① ‘최첨단 풍력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선택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 A: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 C: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 E: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점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